주택담보대출 부족분 최고 1억까지 지급 보증

가계 부실 대책

가계대출 만기 최장 35년 연장

금융소외자 1천만원 이하 연체땐 이자 감면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서민과 금융소외자 지원 방안은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것이다.

가계 부실이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나빠진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그 여파로 기업 등 실물부문이 어려워져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 하락분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 원을 지급 보증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는 대출 만기를 기존 대출금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은행별로 최장 30~35년, 거치기간은 최장 5~10년 연장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에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채무 재조정 사업이 19일부터 본격화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천만 원 이하(원금 기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연체 이자를 모두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 이내에서 나눠 갚으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신용회복기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난다.

이런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 대상은 내년 상반기에 채무액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72만 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대책

상반기 월 5조씩 총 50조원 공급

채권시장 안정펀드 통해 유동성 공급

정부는 18일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이 자본확충에 힘입어 커지게 되는 대출 가능금액을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맺은 양해각서(MOU)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통해 내년에 약 50조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국책은행이 20조 원, 민간은행이 30조 원가량이다.

경기가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달 5조 원씩 30조 원을 공급하고 3분기에는 매달 약 4조원, 4분기에는 매달 3조5천억 원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여력을 키우기 위해 각각 1조4천억 원, 1조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 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규 보증규모는 올해 13조5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5조2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신보와 기보에 1조1천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단기사채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장기회사채펀드의 투자 대상에 카드채 등 금융채를 추가로 넣기로 했다.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 한도를 30%로 제한하고 대신 채권과 CP 투자를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부양 대책

예산 11조6천억 연내 배정

SOC 분야 7조·금융시장 부문 4조

내년 회계연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총 128개 사업, 11조6천756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올해 중에 배정된다.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중 77.2%를 배정해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신규·계속 사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을 위해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올해 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11조6천여억원의 사업을 선정해 연내에 배정키로 했다.

이 같은 규모는 역대 최대로 외환위기 당시 조기배정이 99년의 경우 5천억원, 2000년은 1조원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10배~20배 수준이다.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대상사업은 SOC 분야에서 국가하천정비, 수계치수 사업 등 7조원 규모이고 금융시장 안정 부문에서 중산기금 전출금, 신용보증기관 출연, 산업.중소기업은행 출자 등 4조1천억원 수준이다.

R&D 분야에서는 선도연구센터 지원, 기상 및 지진기술개발, 농림기술개발 등에서 2천300억원,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등 1천500억원, 민생안정 부분에서 취약농가 인력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등에서 900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배정은 1분기에 43.9%, 2분기에 26.1%로 상반기에 70%이며 하반기에는 3분기 17.2%, 4분기 12.8% 등이다. /연합뉴스

일자리·빈곤층 대책

서비스업 규제 완화 고용 창출

장애인·산모·노인 사회복지 대폭 확충

기획재정부의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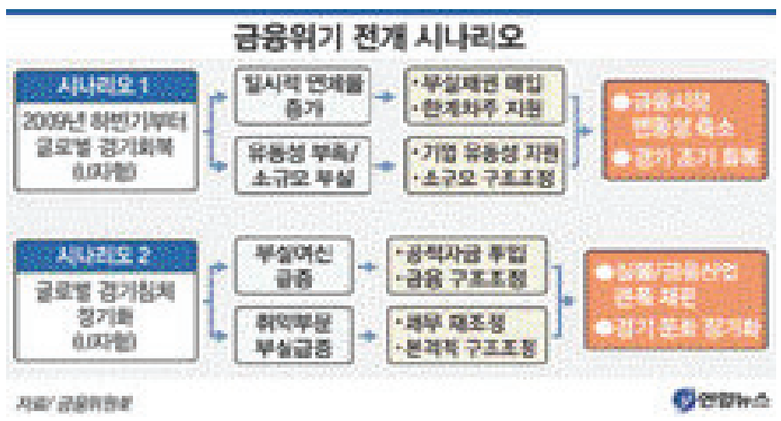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생존이 시급한데, 살아남자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의지는 강하게 전달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찾아보기 어려워 한 번쯤 추슬러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의식주 등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6월30일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 촉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건당 50만원)는 폐지하기로 했다. 50만원 이하로 분할결제하거나 기업 간에 카드를 교환해 사용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은 촉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산모·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은 늘린다.

이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내년 예산은 2천800억원 수혜인원은 16만명이다.

공공부문에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올해 2조5천억원, 내년에 17조5천억원을 절감해 일자리, 민생지원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가 금융에서 실물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물부문과 소통 채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 5단체와 매월 1회 실무협의회를 실시해 애로요인을 접수받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학계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문단도 설치한다. 자금시장과는 협의 채널도 구성한다. 외환딜러 등과 함께 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목적이다. /연합뉴스